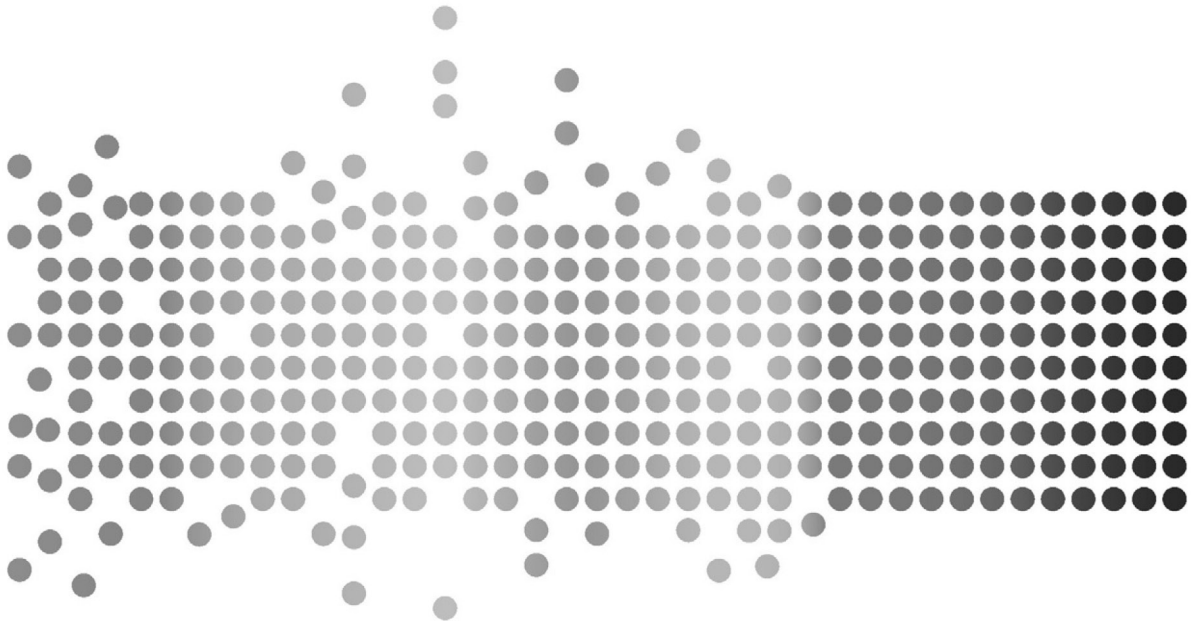


중고령자의 소득 · 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 이경진



연구보고서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발행일 2012년
저자 남 상 호 외
발행인 최 병 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장애인고용안정협회
가 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58-7 93330



머리말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의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고령자들의 관심은 노후대비를 위한 준비로 모아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들 중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23% 내외에 불과하며, 금액 또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중에서 1955-1962년 기간 중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그들의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의 총규모는 약 713만명에 달하며,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업자 규모는 532만명(74.6%)에 달하며, 그 중에서 임금근로자는 약 312만명(취업자의 58.6%)이라고 한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장수위험 또한 이들의 은퇴이후 생활을 위협할 가능성 가계의 순자산은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여기에 기대연금자산을 합하면 총가용자산이 얻어지며, 은퇴자는 잔여생애 동안 소득(재산소득 및 연금)과 공사적 이전을 이용하여 노후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자녀들에 의한 부모 부양이 보편화되었던 과

거세대에 비하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만큼 중고령자들의 노후대비 문제는 더욱 더 절실한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하는 중고령자들의 소득 및 자산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은퇴 이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 주제의 중요성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개개인에 대한 직업력, 연금 가입 형태 및 납부현황, 소득 및 소비행태, 자산보유 현황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자세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이용가능한 조사자료 중에는 충분한 표본 규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연구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들을 통합하여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기대여명 정보 또는 연금제도의 변화 등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은퇴이후의 소비지출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에서 은퇴 전 자산축적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중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녀에 의한 부모 부양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상호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경진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본원의 이철선, 김문길 연구위원 외에도 고용정보원의 이대창 연구본부장, 지방재정연구원의 이상훈 박사, 그리고 노동부의 석상훈 박사가 심의를 맡아 주셨다. 이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100세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만큼 이번 연구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에도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선행연구	23
제1절 외국에 대한 연구	23
제2절 한국에 대한 연구	29
제3장 소득·지출·자산 현황 분석	41
제1절 분석자료	41
제2절 소득현황 분석	42
제3절 지출현황 분석	44
제4절 자산현황 분석	45
제4장 노후소득 충분성 분석	53
제1절 노인가구의 소득·소비지출 현황	53
제2절 노인가구의 자산보유 현황	56
제3절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현황	63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할	67
제5절 노인소득의 국제 비교	69
제6절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한 검토	7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81

부록 87

표 목차

〈표 3-1〉 통계청 조사자료의 규모 비교	41
〈표 3-2〉 소득자료의 비교	42
〈표 3-3〉 가구소득 및 경상소득의 비교	42
〈표 3-4〉 베이비부머, 이전, 이후세대 가구소득 및 경상소득	43
〈표 3-5〉 전체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44
〈표 3-6〉 베이비부머, 이전, 이후세대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45
〈표 3-7〉 베이비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46
〈표 3-8〉 금융자산의 구성	47
〈표 3-9〉 소득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48
〈표 3-10〉 순자산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49
〈표 4-1〉 노인가구의 소득 현황	54
〈표 4-2〉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현황	55
〈표 4-3〉 노인가구의 부동산 보유현황	58
〈표 4-4〉 노인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	60
〈표 4-5〉 노인가구의 부채 보유 현황	62
〈표 4-6〉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2009년 기준)	64
〈표 4-7〉 소득계층별 연금가입률 현황(2009년 기준)	65
〈표 4-8〉 가입연금 형태별 순가용자산 규모(2009년 기준)	66
〈표 4-9〉 세대별 기초생활보장 현황(2009년 기준)	68
〈표 4-10〉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층의 소득수준	71
〈표 4-11〉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소득 구성	72

그림 목차

[그림 2-1]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24

[그림 2-2] 연령대별 수지차 24

[그림 4-1] 은퇴연령의 분포 (영국, BHPS) 24

[그림 4-2] 은퇴유형별 식품비 지출 비교 (영국, BHPS) 24

An abstract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grey cloud-like shap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shapes scattered around it, resembling a splash or a cluster of bubbles.

Abstract

Analysis of Asset Holdings and the Possibility of After-retirement Poverty of the Baby-boomers

1. Introduction

Baby-boomers are those who were born in the post-war period. In case of Korea, the baby-boomers are those who born in 1955 through 1963. The population size for the baby-boomers is 7.13 million, and the share to the total population is 14.6%.

Although most of the baby-boomers are expected to retire during 2010 to 2018, some of them might not have enough assets to cover living expenses after retirement. This is also related to the issue of old-age poverty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importance of the issue,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s for the sufficiency of asset accumulation for the after-retirement life.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o not have good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issues.

In this paper, several data sets will be assembled. Some of those are: Korea Welfare Panel Study (KIHAS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NSO),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KLI and/or KEIS), Korea Retirement Income and

Savings (NPS) and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KIPF).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wofold: first, analyze the income, consumption, and asset accumulation for the aged, and (2) using the estimate of the stream of life-cycle income stream, sufficiency for the after-retirement life will be analyzed.

2. Some Empirical Findings

According to the Korea Retirement Income and Savings (KReIS) survey data, 41.5% of the aged are known to have at least one type of the pension plan, and 58.5% of the baby boomers do not have any pension plan for the after-retirement life. Among those who joined the public and/or private pensions, 34.5% have the public pension plans, whereas 19.0% has public pension plans only. And 11.7% joined the individual pension plans.

6.1% joined individual pension plans only, whereas 13.3% joined retirement pension plans. The share of those who have both public pension plan and individual pension plan is 3.2%, the share of holding public and retirement plan is 9.9%, and the share of those who have all the three types of pension plans is 2.2%.

47.4% of the employed joined public pension plan, 5% of them joined individual pension plan, 14.9% joined both public pension plan and retirement pension plan, 4.4% joined public and individual pension plan.

In this report net usable assets is defined here as the sum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s and total savings, minus total debts.

The amount of net usable assets for the public pension and the individual pension is 89 million Won. Those who joined all the three types of pension plans have 44 million Won.

In 2010, the average monthly income for the aged is 1.8 million Won. The share of private transfer is 26.5%, public transfer is 25.2%, the labor income is 23.5%, and the business income is 14.4%. The aged who were highly educated got 36.1% of their income as the public transfer and 16.3% as property incom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for the aged was 1.4 million Won per month, and the male spent more than the women by 200 thousand Won.

3.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at its maximum of 49.3 million in 2018 and declines continuously since then. Due to the rapid aging, the old will be more than the youth since 2016. Furthermore, continuous increase in the life expectancy at birth causes the support ratio of the old by the labor force to rise from in 2022 to in 2027.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due to aging in the future, the baby boom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life after-retirement. Most of the old keeps their assets as immobile types, such as real estates, they might not have proper preparation for the after-retirement life. According to the 2010 Household Financ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4 •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Statistics Office, the net worth of the baby boomers is 280 million Won. But most of them are allocated as residential estates, whereas financial assets are just 60 million Won. This implies that without additional income in after retirement periods,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aged after retirement will be restricted significantly. In this sense, although it might not be enough, National Pension and/or Retirement Pension will be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for the retired. For the female retirees, the income maintenance for the periods after retirement could be more severe because their life expectancy at birth is longer than the male.

For the policy recommendations, Job creation for the healthy retiree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for the old-aged poor will be important. In addition, Japanese type of continuous employment system combined with the peak-wage before retirement, and the tax incentives for the poor to induce private savings for the retirement life will be an important policy direction towards the safety of the future society.

요약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베이비 붐 세대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 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 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함.

□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자산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이들은 은퇴이후 소비생활에 제약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노후빈곤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임.

□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주된 이유로는 현재 이용가능한 조사자료들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은 은퇴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 소득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지대함.

- 중·고령자계층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분석하고, 은퇴 이후 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본 다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한국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고령자패널 등을 결합하여 베이비 부머들의 보유 연금형태별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공적 및 사적연금 보유현황을 감안한 생애총자산 규모를 추정함.
 - 다음으로 소득 소비·자산을 감안하여 생애소득의 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고자 함.

II. 선행연구

- 경제학 분야에서 자산축적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로는 생애주기가설이 가장 대표적임.
 - 생애주기가설 (life-cycle hypothesis)이란 Ando, and Modigliani (1963)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사람들의 소득 및 소비수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 소비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은퇴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득은 중년기에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역-U자 형태를 보인다고 함.
 - 경제전체로 본다면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낮을수록 저축률이 낮고,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높으면 저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함.
 - 자산축적과 관련하여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게 되지만 장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게 되므로, 축적된 자산의 최고값은

은퇴직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 소득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자산 수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완전예전의 경우에 비하여 소비수준이 낮게 나타는데, 이러한 차이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이라고 함.
 - 또 소득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보유자산 수준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 구체적으로 소득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보유자산수준이 낮은 사람은 완전예전의 경우에 비하여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축적된 자산 규모가 연소득의 4-5배에 이른 사람은 두 경우에 있어서 소비성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Carrol(2001)에서도 한계소비성향이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즉,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의 소비함수는 오목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남.
- 이철선(2009)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시켜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들에게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한 노후 대비가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인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단기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점차 65세까지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이수욱(2010)에서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생활안정 차원에서도 주택소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8 •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 베이비붐 가구의 은퇴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주거소비 유도 및 역모 기기제도 활성화, 부동산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의 전개, 부동산자산 보유비중의 축소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백화중 외(2011)에서는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은퇴후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목표 소득대체율)과 실제 은퇴를 앞둔 근로자 세대가 은퇴시점에 축적한 은퇴자산으로 측정된 은퇴 후 소득수준(예상 소득대체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현재의 중고령자세대가 은퇴시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은 은퇴 전 소득의 약 75% 수준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룹별로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예상소득대체율은 53%이고 미가입자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윤재호·김현정(2010)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소비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을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와 더불어 소비가 평균적으로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음.
 - 자산 최하위 1분위계층에서 소비가 17% 감소하였으나, 다른 자산계층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함.
 - 특히 취업과 관련된 지출의 감소가 은퇴이후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은퇴자와 최하위자산계층에서의 은퇴서 소비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함.

III. 소득, 소비 및 자산의 분포 분석

- 가구주가 베이비부머(1955~1963)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5년에 가구소득이 약 290만원으로 농어가경제조사(254만원, 234만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도 농어가경제조사보다 소득평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부머가구의 경우 2005년에는 모든 조사에서 이전, 이후세대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농가의 경우 이후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가와 어가에서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세대에서도 농가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출규모에서도 가계조사자료에서의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농가와 어가의 경우 2005년에는 농가의 지출이 더 많았으나 2009년에는 어가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간적으로는 2009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2005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명목금액 기준임).
-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가계총자산 3억4천만원 중 부동산 형태로 2억6천만원, 저축 형태로 약 7천만원,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95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수준이었고,
 - 베이비붐세대는 평균적으로 5천8백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4천1백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1천7백만원이었음.

10 •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 금융자산규모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는 평균적으로 7,042만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만원, 전세보증금이 1,481만원이었음.
 - 목돈투자 중 예치식저축은 1,223만원, 주식투자는 495만원으로 나타났다으며, 채권은 4.2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가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산, 저축, 순자산 등의 전체평균이 4분위의 평균값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의 대부분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할 수 있음
- 순자산분위별 자산·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인 순자산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금액이 큰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보임.
 - 5분위의 경우 3억2천만원 정도의 주택자산과 1억4천만원의 총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1억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순자산 평균은 7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자산, 총저축, 순자산의 전체평균이 순자산 4분위계층의 평균값에 인접하게 나타나 자산분포 역시 상위층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IV. 노후빈곤가능성에 대한 검토

-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공·사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 종류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1.5%이었으며, 베이비붐세대의 절반을 넘는 58.5%는 노후를 위하여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음.

- 가입자 중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34.5%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19.0%이었음.
 -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11.7%인데, 그 중에서 개인연금만 가입한 사람은 6.1%, 퇴직연금(퇴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은 13.3%인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2%,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9.9%, 그리고 세 종류의 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은 2.4%이었음.

-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7.4%,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9.9%,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3.0%이었음.
 -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24.5%, 개인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5%,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4.9%, 그리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4%이었음.
 - 또 취업자 중에서 무연금인 사람은 46.2%이고, 비취업자 중 무연금인 사람은 82.9%에 이름.

- 순가용자산이란 비주거용 부동산자산과 총저축의 합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8,900만원 정도의 순가용자산을 가지고 있었음.
 -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가진 사람들이 4,4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무연금인 사람들은 936만원으로 가장 적은 순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월평균소득은 180.2만원(연간으로는 2,161.8만원)으로 나타났다.
 - 총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높고, 공적

12 •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유자는 연 3,950만원(월 329만원)이고, ‘무학(글자모름)’의 경우 연 1,568만원(월 1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고학력자 소득의 40%선에 불과하였음.
- 소득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학력자는 공적이전소득(36.1%)과 재산소득(16.3%)의 비중이 높았으나, 무학인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10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이었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 20만원 정도 더 많았음.

- 연령대별로는 60대 후반과 85세 이상가구에서 1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75-84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27-12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음.
-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월 2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이 월 63.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별로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161만원이었으며, ‘무학(글자모름)’이 10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관련비’와 의 지출(43.0%)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보건의료비’가 24.7%로 그 다음을 이었음.

-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모든 구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 2010년 현재 노인부부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18.6%, 부부 중 1인만 소유한 경우가 75.0%, 그리고 부부가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보유가구의 평균금액은 2억 1,742만원임.
- 성별로는 남자의 10.2%, 그리고 여자의 25.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금액 또한 남자가 2억 6,807만원, 여자 1억 7,899만원으로 약 9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부동산 보유비율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보유 부동산 금액간에도 정비례 관계가 있었음.

- 전문대 이상 그룹에서 부동산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유부동산의 가액도 5억 6,503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노인가구(부부)를 기준으로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7.8%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부부 중 한사람만 보유한 경우는 41.9%, 그리고 부부가 모두 보유한 경우는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평균값은 2,554만원에 이르고 있었음.
-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3,4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거노인가구가 934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비율이나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5분위별로 보더라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
 - 제5분위는 평균 6,105만원, 제4분위는 2,406만원, 제3분위는 2,083만원, 제2분위는 1,374만원, 그리고 제1분위에서는 807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가구(부부기준)의 부채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71.6%에 이르고, 부부 중 한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27.1%, 그리고 부부 모두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이었으며, 평균 부채규모는 1,7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보유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이 31.3%로 농촌지역 22.1%보다 더 높았음.
 - 평균 부채금액 또한 도시지역이 2,173만원으로 농촌지역의 766만원보다 1,400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음.

V.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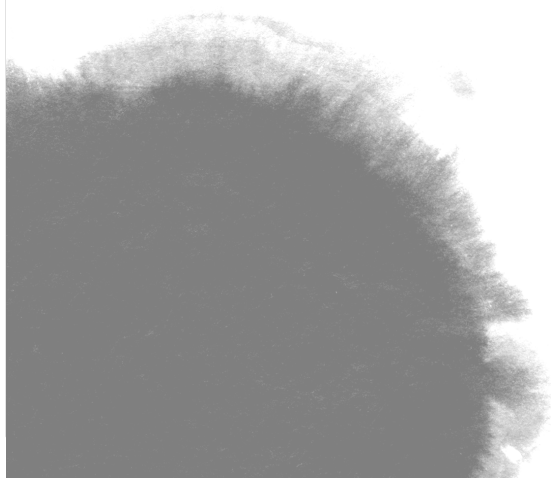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의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3,619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더하여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2010년 현재는 6.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이 노인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대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은퇴 이후 현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금융 자산보다는 부동산 행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은퇴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음.
-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2억8천만원 인데, 대부분의 자산이 거주주택 형태이고 금융자산이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은퇴이후의 소비지출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에서 은퇴 전 자산축적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중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부족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에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여자의 경우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방안,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변화폭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데, 특히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베이비 붐 세대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한다. 생애주 기상 중년에 해당하는 이들은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으며, 장년기에 와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이다. 이들 베이비부머 중 취업자는 약 532만명 규모이며, 그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규모는 약 3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걸쳐있던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고용유연화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경우도 많았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¹⁾ 이들 중 상당수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충분한 자산을

1) 이와 같은 핵심 생산계층의 은퇴는 다시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게 되면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한 어려워

축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산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이들은 은퇴 이후 소비생활에 제약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노후빈곤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다.

OECD(2009)에 따르면 가처분소득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의 평균값은 13.3%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구조분석이나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은 과거 모든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대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이나 빈곤감소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주된 이유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조사 자료들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연금자산을 포함하는 생애 총 자산을 가계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분석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은 은퇴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 소득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정사회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론적·실증적 정합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중·고령자계층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분석하고, 은퇴 이후 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본 다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먼저 한국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고령자패널 등을 결합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보유 연금형태별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공적 및 사적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소득·소비·자산과 생애소득의 흐름에 기반을 두고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노동패널 조사, 그리고 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이다. 이들 자료가 선택된 주된 이유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자료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집한 자료이며 가장 일찍부터 자료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노후보장패널조사의 경우 1995년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한 패널조사여서 중·고령자의 자산보유 현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 복지패널은 앞의 두 조사 자료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자료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며, 저소득층의 자산보유현황을 잘 측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패널조사는 아니지만 가계동향조사 자료 또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계동향자료에 농가조사자료와 어가조사자료를 결합하면 횡단시점에서 전국 가계의 소득분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소득 충분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분석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다. 1단계는 연도별 소득을 추정하는 작업인데, 주로 쓰이는 방법은 항상소득의 개념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연령별 임금 정보를 이용하여 연금자산을 추정하는데, 독립변수로는 연령 및 그 제곱항, 결혼 여부, 자녀수 및 그 제곱항, 직업의 중

류 등을 사용하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임금식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연령 변수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이 증가하다가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수의 증가는 처음에는 임금이 하락하다가 나중에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더미는 음(-)의 관계를 가지며, 직업종류는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김상호 2007, p. 130).

구체적으로 필요한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여 연도별 소득을 구하고, 다음으로 연금자산 규모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순자산을 더하여 총 가용자원을 도출한다.

1단계로 추정해야 할 임금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it} = \mu + x_{it}\beta + v_i + \epsilon_{it}$$

단 W_{it} 는 연령이 t 인 근로자 i 의 연간 임금소득(로그값), x_{it} 는 근로자 i 의 연령 t 에서의 독립변수, v_i 는 개별효과, 그리고 ϵ_{it} 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x_{it} 는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화할 수 있는 설명변수이며, β 는 추정해야 하는 모수(parameter) 벡터이다. 설명변수의 예를 들면 연령, 결혼여부, 자녀수, 직업유형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v_i 는 시간불변의 속성을 지니는 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며, 교육기간, 재능, 성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추정식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이다.

확률효과(random effect, RE) 모형과 고정효과(fixed effect, FE)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여기서는 Hausman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Hausman 검정법은 (1) 확률효과와 설명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LSDV 모형의 OLS와 GLS는 모두 일치성을 갖지만 OLS가 비효율적이며, (2) 대립가설하에서 OLS는 일치성을 갖지만 GLS는 일치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귀무가설하에서는 두 추정량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 어느 모형이 우수한가에 대한 검정을 하게 된다. 즉

$$\begin{aligned}\text{검정통계량} &= (b_{FE} - b_{RE})' [\text{Var}(b_{FE} - b_{RE})]^{-1} (b_{FE} - b_{RE}) \\ &= (b_{FE} - b_{RE})' [\text{Var}(b_{FE}) - \text{Var}(b_{RE})]^{-1} (b_{FE} - b_{RE})\end{aligned}$$

은 귀무가설하에서 자유도 ($K-1$)인 chi-square 분포를 따르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경우 확률효과(RE)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Greene, 2003).

2단계는 연금자산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료에서는 연금자산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의 이자율, 잔여 수명, 인플레이션을 등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값을 얻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감수하고 민감도분석을 이용하면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순자산보유고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므로 가계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하여 순자산을 구한다. 간혹 순금융자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산축적과정이 대부분 부동산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할 때 가계순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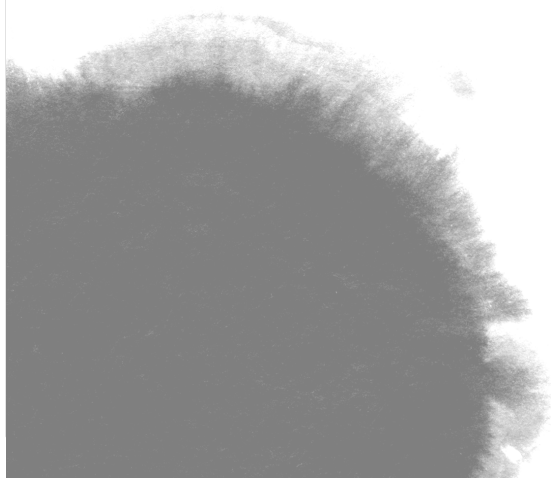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이상에서 구해진 항상소득, 연금자산 총액, 그리고 순자산보유고를 합

산하면 생애에 걸친 총가용자산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가구의 은퇴이후의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노후소득의 충분성 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소개에 이어 소득·지출 자산의 보유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노후소득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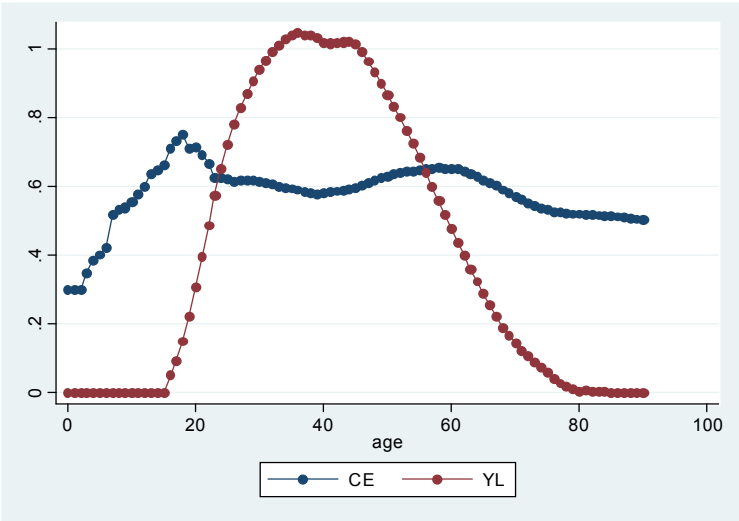


제2장 선행연구

여기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보유 현황이나 자산축적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자산축적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로는 생애주기가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이란 Ando, and Modigliani (1963)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사람들의 소득 및 소비수준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비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은퇴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득은 유년기에서 청년기, 그리고 은퇴이후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년기에서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역-U자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전체로 본다면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낮을수록 저축률이 낮고,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높으면 저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자산축적과 관련하여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게 되지만 장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하게 되므로, 축적된 자산의 최고값은 은퇴직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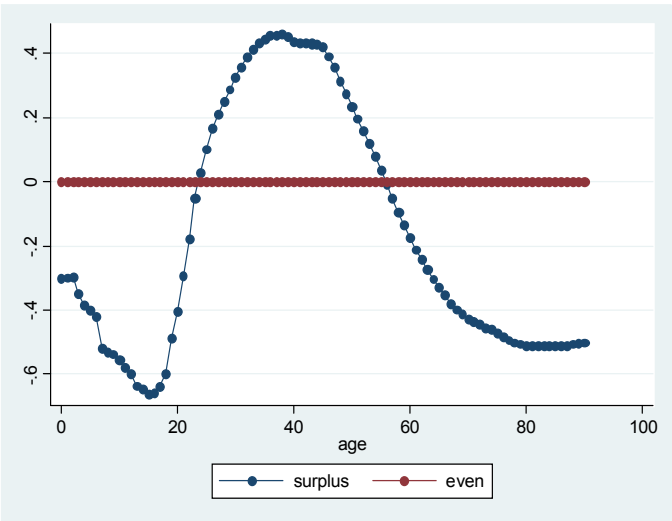
Lee and Mason (2011)은 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S)을 이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였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2000년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한국, 2000)



주: CE는 소비, YL은 소득임
자료: <http://www.ntsaccounts.org>

[그림 2-2] 연령대별 수지차 (한국, 2000)



주: surplus는 소득과 소비의 차이임.
자료: <http://www.ntsaccounts.org>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초반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고,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며, 50대 후반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대 초반에서부터 50대 후반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수지차의 누적으로 정의되는 자산규모의 최고액은 은퇴직전에 나타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외국에 대한 연구

먼저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1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Easterlin, et al.(1993)을 시초로 Keister and Deeb-Sossa(2001), Lusardi and Mitchell(2006), Wolff(2007) 등의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Easterlin, et al.(1993)은 생애주기의 경험이란 관점에서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여 은퇴시점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부모세대를 비교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부모세대의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은퇴 후 시점에서 볼 때 베이비부머는 물질적 측면에서 부모들 세대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총복지(total welfare)라는 관점에서 만족도를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더 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우선 제1/5분위와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는 부모세대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혼가능성과 소자녀 등으로 인한 노후의 독거 가능성의 증가는 은퇴이후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자녀들의 부모 돌봄에 대한 가치가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소자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은퇴이후 삶의 만족도는 부모세대보다 높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출산연령대의 여성들은 과거 부모세대보다 자녀를 덜 낳는 대신 직장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출산 및 영아 양육기를 벗어난 연령대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그로 인한 여가의 감소는 폭넓은 의미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eister and Deeb-Sossa (2001)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 실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자산(wealth)을 축적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전기(45~54세) 및 후기(55~64세)로 베이비붐 세대를 양분하고, 자산의 축적정도 및 부모세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산보유측면에서 계층간 이동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간 자산보유 격차는 주택보유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베이비붐세대에 비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자산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서도 모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내의 자산불평등이 현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Lusardi and Mitchell(2006)에서는 2004년 건강 및 은퇴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자산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노후대비에 대한 정보를 함께 분석하였다. 초기 베이비붐 세대들의 순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5%에 위치한 사람은 3만7천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75%에 위치한 사람은 10배가 넘는 규모인 4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같은 코호트(cohort) 내

에서 현저한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고교 중퇴자는 순자산의 중위수가 2만3천 달러이지만, 대졸자의 중위수는 10배가 넘었다. 베이비붐 세대 중 흑인과 히스패닉은 가장 낮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였으며,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이들의 노후대비는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주식보유자나 개인은퇴구좌(IRA)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노후대비 계획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저축과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olff(2007)는 1983년과 2001년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SCF)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당시 40~55세 그룹인 베이비붐 세대와 1983년 당시 동일 연령대인 사람들간의 자산보유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관심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경제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결과를 소개하면 소득의 경우 두 그룹의 사람들은 상대적 위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자산(net worth)만을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발견하였다. 순자산에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까지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위치에 있어서 다소의 개선이 있었으나, 합산한 값의 중위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 위치가 나빠졌음을 발견하였다.

Love, et al.(2008)은 미국 고령자 가구의 자산보유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1998-2006 기간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HR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자산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은 2006년에 3.6% 정도 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8% 정도의 가구들이 향후 소득빈곤선의 1.5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1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은퇴 이전의 소득 대비 총자산으로부터의 소득흐름 비율을 살펴보다라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6년의 베이비부머들의 자산보유 현황을 1998년에 동일한 나이였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노후대비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nualized wealth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고령자기구들은 자신들의 잔존수명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더 완만하게 자산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nnell, et al. (2006)에서는 국가은퇴위험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근로연령대에 속하는 가구 중 현재 및 향후의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이 지수는 가구의 은퇴 전과 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구한 다음, 이 값이 주어진 기준 대체율과 비교하여 그 이하인 가구들을 위험가구로 보고 이들의 비율을 국가은퇴위험지수라고 본 것이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기 베이비부머 세대(1946-54 출생자)의 36%가 은퇴위험에 처해 있으며,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1955-6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더 높은 43%가 은퇴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이 가장 은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가리키며, 통상 ‘단카이’세대라고 불린다. 인구규모로는 80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베이비붐 기간에 짧은 이유는 1948년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Hayashi(1997)는 일본의 저축행태에 대해 발표된 초창기의 연구인데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저축률은 통상적으로 인지되었던 수준보다 높지 않다. 둘째, 자산축적은 젊을 때부터 시작되

어 인생의 끝에 가까운 시점까지 계속되는데, 이처럼 소비되지 않고 축적된 자산은 유산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Barthold and Ito (1992)는 일본의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자산의 1/3~1/2 정도가 유산에 기인하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고령자 가구는 충분하게 소비를 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Kitamura, et al. (2000)은 1979~1989기간 중 가구소득 및 지출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NSFIE)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가계저축과 자산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성향과 자산축적 과정에 있었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Hayashi(1997)의 결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첫째로 베이비붐 세대가 1990년대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을 보였음을 발견하고 이 시기에 일본을 지배한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이들의 자산축적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cohort분석에 의하면 저축률은 횡단면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또 젊은 세대의 저축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1984~1989년 기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률이 하락하지 않았으나, 1989~1994년 기간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점을 전후한 사회보장자산(social security wealth, SSW) 규모의 추정치는 약 5천백만엔(32만4천유로)인데, 자녀들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Hall and Mishkin (1982)은 미국 PSID자료를 이용하여 PI-LCH가 성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기의 소비는 일시적 소비 변화보다 하상소득의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하지만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 또한 소비에 대하여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80% 정도는 항상소득-생애주기가설로 설명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동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Zeldes(1989)는 상대위험회피도가 일정한(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소비함수를 도출한 다음 그 결과를 완전예견(perfect foresight)하의 소비함수와 비교 분석하였다. 소득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자산 수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완전예견의 경우에 비하여 소비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라고 보았다. 또 소득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보유자산 수준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보유자산수준이 낮은 사람은 완전예견의 경우에 비하여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적된 자산 규모가 연소득의 4-5배에 이른 사람은 두 경우에 있어서 소비성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rol(2001) 또한 Zeldes(1989)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계소비성향이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의 소비함수는 오목한(concave)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산보유 수준이 낮은 경우 일시적인 소득의 변화에 대하여 소비가 더 크게 반응함을 의미하며, 유동성제약하의 소비행태와 소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를 가진 가계의 소비행태는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제2절 한국에 대한 연구

한국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가설을 이용하여 cohort별로 저축률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대근·이창용(1997)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저축률이 상승한 이유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저축률이 상승한 때문인지, 아니면 중년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률이 높아졌기 때문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률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특별히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소득 획득과 자산축적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자산을 축적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철선(2009)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조세 부담 및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2010~2018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9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 명에 불과해 2009년 1인당 조세부담액(467만원)을 적용하면 7조 7,210억 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어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빚어진 이른바 '2007년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들에게는 당장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한 노후 대비가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단기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점차 65세까지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시내·심규호(2010)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 인구총조사 10% 표본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가계동향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소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종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외에도, 소득 및 소비의 특징을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은퇴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 가계동향자료를 중심으로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계산한 박시내·심규호(2010)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40대 후반이나 50세에 정점에 이른 다음,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베이비붐 세대는 353만원, 그 이전세대인 55~59세는 324만원, 그리고 베이비붐 이후세대인 34~45세는 3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에 출생한 세대간의 소득 격차는 은퇴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원천별 구성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소득이 65.3%, 사업소득이 25.4%, 이전소득이 6.0%의 순인데, 그 이전세대는 근로소득이 35.5% 사업소득이 23.1%, 그리고 이전소득이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소득계층별로 근로소득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60세 이상 세대의 소득 1분위계층의 근로소득비중은 1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비 지출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자녀세대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높은 대학등록금이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 9.0%, 교통비

8.9%,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6.9%로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식료품비가 17.0%,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12.7%, 보건의료비가 10.1%, 교통비가 8.6%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이수욱(2010)은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자산 소비행태를 전망하고, 은퇴 이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쯤 매각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주택을 매각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기는 61세(2015년) 전후, 64세(2018년) 전후, 그리고 71세(2025년) 무렵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 장래 소득과 소비 그리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015~2025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20%가 재분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잠재적 시장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주택소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베이비붐 가구의 은퇴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걱정주거소비 유도 및 역모기기제도 활성화, 부동산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의 전개, 부동산자산 보유비중의 축소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준(2010)에서는 노동패널자료와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자산을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직전 세대에 비하여 경제적 자산의 형성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나, 자산의 구성 측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석재은·이기주(2010)는 베이비붐 세대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관

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수단별로 유형화하고, 각 집단특성별로 어떻게 노후 소득 보장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중 404만 명이 무연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가용자산(=부동산자산-거주용부동산+금융자산-부채)을 집단특성별로 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진 집단에서 8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무연금집단은 8천6백3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보면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가진 집단의 자산소득이 2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연금집단은 25만7천원이었다(남성 87만원, 여성 15만원). 이들은 유형별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전략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상호(2007)에서는 노동패널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자산의 도입 및 적용확대가 가계저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금자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수급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전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먼저 계산한 다음, 여기서 총보험료를 차감하여 기준시점의 순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는 LAD(Least Absolute Deviation) 회귀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가구별 생애소득으로 순잔여생애소득을 사용한 경우 생애소득, 연령, 생애소득과 연령의 복합변수, 교육연수 및 맞벌이 더미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자산이 가계저축을 대체하는 효과의 크기가 90% 신뢰수준에서 약 0.3-0.4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가입자 확대가 가계저축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최현자 외(2009)에서는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우리나라 은퇴준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은퇴소득대체율과 은퇴자금충분도를 산출하였는데,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의 은퇴소득 대체율은 0.41, 은퇴자금충분도는 0.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소득

대체율은 0.62로 나타나서, 이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퇴직전 소득의 21%가 더 필요하고, 원하는 은퇴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퇴이전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40%의 은퇴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50대의 경우 목표소득대체율은 높지만 은퇴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았고, 은퇴자금충분도도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전문관리직의 경우 은퇴소득대체율은 낮은 반면 은퇴자금충분도는 높게 나타났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은퇴소득대체율은 작아지고 은퇴자금충분도는 커지고 있었다.

백화중 외(2011)에서는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목표 소득대체율)과 실제 은퇴를 앞둔 근로자 세대가 은퇴시점에 축적한 은퇴자산으로 측정된 은퇴 후 소득수준(예상 소득대체율)을 측정하여 이들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중고령자세대가 은퇴시 필요로 하는 소득수준은 은퇴 전 소득의 약 75% 수준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예상소득대체율은 53%이고 미가입자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대표적 개인은 생애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소비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청·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높고, 노년기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이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은퇴이후 시기에 있어서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소비는 은퇴 이후에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은퇴이후 충분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지는 않겠으나, 자산 축적이 충분

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령자 세대의 경우에는 소비지출의 감소가 관찰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생애주기가설의 실증적 타당성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조사자료의 부재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동일한 개인 (또는 가구)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던 반면, 우리의 경우 패널자료의 구축기간이 짧고, 관련문항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실제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에 걸친 패널조사 자료의 부재’라는 이유 때문에 국내의 은퇴관련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아니면 패널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속성이 혼합된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은퇴 이후에 필요한 적정 소득대체율’, ‘은퇴자산의 충분성’, 그리고 ‘은퇴를 전후한 소비지출의 변화 여부’ 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기법이나 분석대상 자료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얻어지기도 한다. 이에 관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백화중 외(2011)와 석상훈(2010)을 들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법을 적용한 백화중 외(2011)에서는 은퇴를 전후하여 소비지출이 16.2%만큼이나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소득가설이 실증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였다. 반면, 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석상훈(2011)의 연구에서는 은퇴이후의 소비에 대한 은퇴이전의 소비 비율이 0.94로 나타나서, 은퇴로 인한 소

비지출의 감소폭은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윤재호·김현정(2010)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소비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을 분석하였다. 처치효과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유의성은 크게 높지 않으나 은퇴와 더불어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은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분위별 및 소비비목별로 은퇴효과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와 더불어 소비가 평균적으로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자산 최하위 1분위계층에서 소비가 17% 감소하였으나, 다른 자산계층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소비비목별로 살펴보면 차량유지비가 21% 감소하고, 기타소비(대중교통비 및 피복비)가 14% 감소하여, 취업과 관련된 지출의 감소가 은퇴이후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자발적 은퇴자의 경우 소비감소가 15%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은퇴의 경우 소비지출이 6%p만큼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최하위자산계층에서 예상하지 못한 은퇴의 소비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외에도 자산이나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항상소득-생애주기 가설(permanent income- life-cycle)이 가장 대표적이다. 항상소득-생애주기 가설은 Modigliani-Brumberg (1954)와 Friedman (1957, 1963)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장기에 걸쳐 효용을 최대화 하는 합리적인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합리적 소비자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소득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향후의 소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Hall(1978)은 미국 거시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는 항상소득-생애주기설이 성립하는 경우의 소비는 다음과 같이 확률보행(random walk) 과정을 따르게 됨을 보였다.

$$C_t = \mu + C_{t-1} + \epsilon_t, \quad \epsilon_t \sim N(0, \sigma^2)$$

이차식(quadratic) 형태의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이 식에 대하여 분기별 소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의 소비는 유의적이지 않아서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산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²⁾

Zeldes(1989) 및 Carrol(2001)이 도출한 이론적 소비함수를 실증분석이 가능하도록 변형한 모형은 허석균(2005)과 김현정·김우영(2009)에서도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이용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C_t = \beta_0 + \beta_1(A_t - D_t + Y_t) + \psi_t \theta + \epsilon_t$$

여기서 C_t 는 가계소비, A_t 는 자산, D_t 는 부채, Y_t 는 소득, ψ_t 는 가계의 특성, ϵ_t 는 확률적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또 β_1, β_2, θ 는 추정될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결국 생애주기에 걸쳐 효용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합리적 개인은 이용 가능한 총재원과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며, 특히 이 수식은 부채가 소비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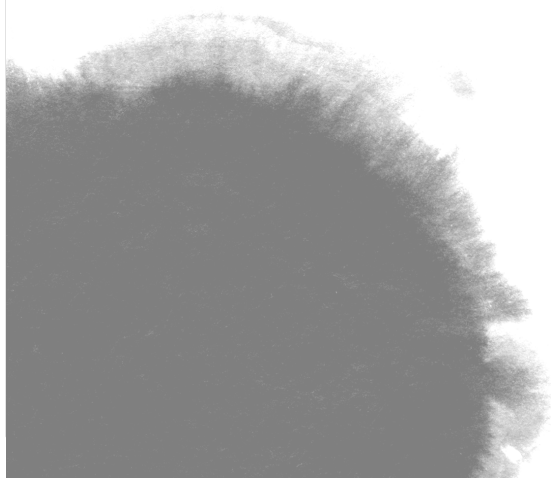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2) 이 결과에 대하여 Hall은 현실에 있어서 자산가격의 변화를 항상소득의 변화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김현정·김우영(2009)에서는 2000~2007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는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동성 제약의 완화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채상환 부담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은 소비에 대하여 뚜렷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7년 한 해에 대하여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위 1-2분위에 있어서는 부채가 소비에 대하여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3분위에서는 음(-)의 부호를 가지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그룹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평균보다 높은 그룹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동성제약이 큰 가계일수록 부채가 소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과 자산축적 현황이 이전세대와 이후세대에 비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본다.

3장

소득·지출·자산 현황 분석



제3장 소득·지출·자산 현황 분석

제1 절 분석자료

이하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어가경제조사 자료의 수집범위와 표본규모를 살펴본다.

〈표 3-1〉 통계청 조사자료의 규모 비교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한국복지패널
조사연도	1950~2011	1953~2011	1963~2011	2005~2012
사용연도	2005~2009	2005~2009	2005~2009	2005~2009
2005년 조사가구	11,367	3,048	1,127	7,072
2009년 조사가구	10,881	2,652	1,128	6,034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로서 농·어가, 기타(섬지역, 여관 등)를 제외한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03~2010년 자료이다. 이처럼 농가와 어가 경제조사 자료를 추가한 이유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되지 않는 농·어가의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하고,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제2절 소득현황 분석

여기서는 자료들(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소득분포를 알아본다. 특히 가구주가 베이비부머(1955~1964)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분석하였다.³⁾ 여기서 베이비부머의 기준을 1964년까지로 정한 이유는 5세대위의 코호트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표 3-2〉 소득자료의 비교

(단위: 가구)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한국복지패널
베이비부머 가구 수	2005	3,786	517	287	1,457
	2009	2,958	426	322	1,120

베이비부머 가구 수를 파악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베이비부머인 가구는 2005년에 3,786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33%로 나타났다. 농어가 경제조사의 경우는 각각 17%, 25%로 나타나서 농가와 어가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가구소득 및 경상소득의 비교

(단위: 원)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2005	가구소득	2,898,284	2,541,918	2,335,696
	경상소득	2,778,718	2,148,176	1,966,162
2009	가구소득	3,002,040	2,567,800	2,828,783
	경상소득	2,876,468	2,275,508	2,517,783

자료: 통계청

3) 소득, 지출 모두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5년에 가구소득이 약 290만원으로 농어가경제조사(254만원, 234만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도 농어가경제조사보다 소득평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조사에서 2009년이 2005년보다 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어가에서는 2005년에는 농가의 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어가의 소득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4〉 베이비부머, 이전, 이후세대 가구소득 및 경상소득

(단위: 원)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이전 세대	2005	가구소득	2,545,747	2,375,297	2,191,368
		경상소득	2,382,085	1,960,557	1,798,460
	2009	가구소득	2,058,697	2,282,017	2,503,524
		경상소득	1,919,211	1,989,714	2,177,827
베이비 부머	2005	가구소득	3,238,813	3,394,614	2,533,597
		경상소득	3,145,119	3,091,743	2,274,352
	2009	가구소득	3,557,344	3,862,045	3,524,424
		경상소득	3,457,526	3,552,018	3,221,785
이후 세대	2005	가구소득	2,899,068	2,974,329	3,736,093
		경상소득	2,796,471	2,754,828	3,169,917
	2009	가구소득	3,396,106	4,016,469	3,177,684
		경상소득	3,264,503	3,824,936	2,984,031

베이비부머가구의 경우 2005년에는 모든 조사에서 이전, 이후세대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농가의 경우 이후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어가에서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세대에서도 농가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지출현황 분석

여기서는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지출 규모를 살펴본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베이비부머(1955~1964)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분석하였다.⁴⁾

〈표 3-5〉 전체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단위: 원)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2005	가계지출	2,366,421	2,220,756	1,907,968
	소비지출	1,871,887	1,614,844	1,473,505
2009	가계지출	2,437,279	2,214,481	2,255,392
	소비지출	1,883,783	1,668,089	1,721,339

자료별로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의 지출이 가장 높았다. 농가와 어가의 경우 2005년에는 농가의 지출이 더 많았으나 2009년에는 어가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으로는 2009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2005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명목금액 기준임).

4) 소득, 지출 모두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음

〈표 3-6〉 베이비부머, 이전, 이후세대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단위: 원)

구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이전 세대	2005	가계지출	2,048,814	2,096,321	1,826,483
		소비지출	1,592,367	1,496,743	1,389,131
	2009	가계지출	1,634,419	1,965,761	1,994,650
		소비지출	1,253,331	1,471,663	1,516,984
베이비 부머	2005	가계지출	2,691,885	2,862,991	2,105,383
		소비지출	2,134,096	2,187,243	1,660,436
	2009	가계지출	2,986,713	3,402,510	2,829,722
		소비지출	2,283,657	2,554,368	2,127,406
이후 세대	2005	가계지출	2,348,289	2,504,512	2,234,872
		소비지출	1,880,368	2,152,266	1,906,616
	2009	가계지출	2,720,847	3,126,340	2,461,675
		소비지출	2,127,752	2,682,420	2,077,009

베이비부머가구의 경우 2005년, 2009년 모두 모든 조사에서 이전, 이후세대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와 어가로 구분해 볼 때에도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세대인 농가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자산현황 분석

통계청의 농가조사 자료는 자산금액의 불일치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분석시점과 가장 근접한 자료인 가계금융조사자료의 자산 및 부채를 분석하기로 한다.

1.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표 3-7>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 베이비붐세대는 가계총자산 3억4천만원 중 부동산 형태로 2억6천만원, 저축 형태로 약 7천만원,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95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수준이다. 베이비붐세대는 평균적으로 5천8백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4천1백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1천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베이비부머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세대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가중치)	10,000 (100.0)	3,504 (35.1)	2,212 (21.8)	4,284 (43.1)
총자산	27,268	30,697	33,775	21,191
-부동산자산	20,661	25,912	25,785	13,798
·거주주택	11,564	13,803	13,738	8,644
·거주주택 이외	8,917	12,033	11,725	4,962
-기타자산	779	523	948	902
·자동차	587	354	740	699
-저축총액	5,828	4,262	7,042	6,491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전세보증금	1,546	559.4	1480.8	2381.7
·월세보증금	193	88.4	174.0	287.9
순자산액	23,005	27,191	28,015	17,067
부채총액	4,263	3,506	5,761	4,124
-부채액	2,884	1,932	4,084	3,052
·금융대출	2,880	1,930	4,079	3,047
·임대보증금	1,380	1,573	1,677	1,072
경상소득	3,771	2,533	4,760	4,279
가처분소득	2,912	1,971	3,619	3,32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원자료(2010).

2. 금융자산의 구성

<표 3-8>은 베이비부머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평균적으로 7,042만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만원, 전세보증금이 1,481만원이었다. 목돈투자 중 예치식저축은 1,223만원, 주식투자는 4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4.2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가중치)	10,000 (100.0)	3,504 (35.1)	2,212 (21.8)	4,284 (43.1)
총저축	5,828	4,262	7,042	6,491
1.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적립식	2,323	1,526	3,160	2,549
·목돈투자	1,433	1,861	1,722	938
·예치식저축	1,104	1,584	1,223	652
·주식	323	272	495	276
·채권	6	3	4	9
·기타저축	333	227	504	333
2. 전세보증금	1,546	559	1,481	2,382
3. 월세보증금	193	88	174	28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원자료(2010).

3.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표 3-9>는 소득분위별로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가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 저축, 순자산 등의 전체평균이 4분위의 평균값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의 대부분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소득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주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전체	33,775	13,738	7,042	5,761	28,015
1분위	5,852	2,705	1,767	1,294	4,558
2분위	12,675	5,997	3,236	2,310	10,366
3분위	20,035	9,032	4,646	3,480	16,556
4분위	32,918	14,036	6,687	5,230	27,688
5분위	63,922	24,318	12,665	11,005	52,917
100만원 이하	5,784	2,884	1,792	1,171	4,613
101~200만원	9,576	4,251	3,009	1,999	7,578
201~300만원	17,256	8,137	4,113	3,066	14,190
301~400만원	26,571	11,413	5,302	4,994	21,577
401~500만원	31,146	14,483	6,604	4,353	26,793
501~600만원	38,926	15,113	7,525	6,096	32,830
601~700만원	45,741	21,044	8,873	6,929	38,812
701~800만원	56,406	22,036	9,487	8,567	47,839
801~900만원	55,112	25,275	11,240	11,487	43,625
900만원 이상	97,502	31,536	20,266	17,533	79,969

주: 소득5분위의 구분 기준은 120만원 이하가 1분위, 120~240만원이 2분위, 240~362만원이 3분위, 362~559만원이 4분위, 그 이상은 5분위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원자료(2010).

4. 순자산분위별 자산·부채 현황

<표 3-10>은 순자산분위별 자산·부채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1분위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인 순자산의 값이 음수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들 중 금액이 큰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5분위의 경우 3억2천만원 정도의 주택자산과 1억4천만원의 총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1억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순자산 평균은 7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 총저축, 순자산의 전체 평균이 순자산 4분위계층의 평균값에 인접하게 나타나 자산분포 역시 상위층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10〉 순자산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주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전체	33,775	13,738	7,042	5,761	28,015
1분위	2,825	551	1,368	3,805	-980
2분위	7,446	2,9332	3,438	2,281	5,165
3분위	14,807	7,169	4,647	2,910	11,896
4분위	28,892	13,834	6,863	5,411	23,482
5분위	83,434	32,020	14,178	11,042	72,392
0이하	4,554	1,027	1,729	10,654	-6,100
0~5천만원	3,680	936	2,011	1,488	2,192
5천~1억원	9,643	4,377	3,901	2,259	7,385
1~2억원	18,043	4,903	9,425	3,521	14,522
2~3억원	29,898	14,517	6,910	5,324	24,573
3~5억원	45,616	21,579	9,601	6,838	38,779
5~7.5억원	70,574	29,893	13,735	10,234	60,341
7.5~10억원	98,246	38,123	16,415	12,490	85,756
10억원 이상	204,060	56,216	27,348	25,358	178,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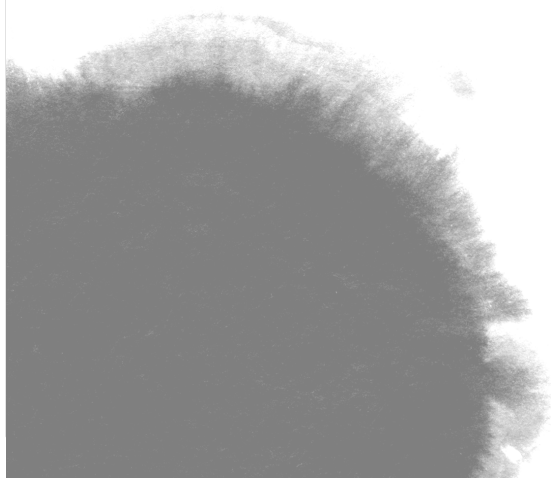
주: 자산 5분위의 구분기준은 1분위는 2,590만원 이하, 2분위는 8,080만원 이하, 3분위는 16,070만원 이하, 4분위는 32,496만원 이하이고, 그 이상은 5분위에 속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

이상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불충분성 정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전망해 본다.

4장

노후소득 충분성 분석



제4장 노후소득 충분성 분석

제1 절 노인가구의 소득·소비지출 현황

국민연금연구원(2010)에 의하면 은퇴는 생애근로를 마감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생애근로경험과 공적연금 수급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8가지 은퇴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애근로경험자 중에서 생애근로를 그만두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은퇴자’와 ‘미은퇴자’로 구분한다. 그 다음 단계로 ‘은퇴자’는 ‘완전은퇴자’와 ‘점진적 은퇴자’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한 사람을 말하며, 후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후 가교일자리(bridge job)를 거치면서 생애근로가 끝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연금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은퇴경로별 평균 은퇴연령과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은퇴경로별 평균 은퇴연령

(단위: 세, %)

은퇴경로	세부 유형	주된 일자리 마감 시기 (A)	마지막 일자리 끝난 시기 (B)	공적연금 수급 시작 시기 (C)	구성비 (%)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A=B)	유형 1	59.8	59.8	59.8	3.6
	유형 2	53.9	53.9	65.0	7.7
	유형 3	65.0	65.0	53.9	3.5
	유형 4	55.2	55.2		50.2
	소계				65.1
가교 일자리에서 은퇴 (A<B)	유형 5	48.4	65.0	65.0	1.0
	유형 6	43.9	65.0	65.0	3.3
	유형 7	50.7	65.0	65.0	4.1
	유형 8	47.2	65.0		26.5
	소계				34.9
전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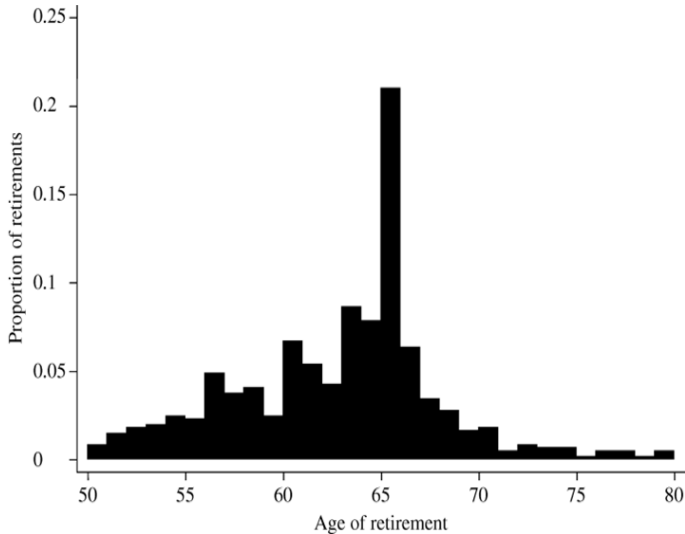
주: 구성비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부분합과 소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0), 제3차(2009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심층분석보고서, p. 69.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65.1%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근로를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4.9%는 가교일자리(bridge job)를 거친 후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금액의 충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적연금 수급을 통하여 노후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은퇴자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23.3%). 이를 다시 은퇴경로별로 구분하면, 14.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고, 8.4%는 가교 일자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 외에도, 은퇴자의 11.2%는 은퇴시점과 공적연금 수급시작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 취약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국의 경우 50-65세까지 은퇴가 꾸준히 증가하며, 65세에 은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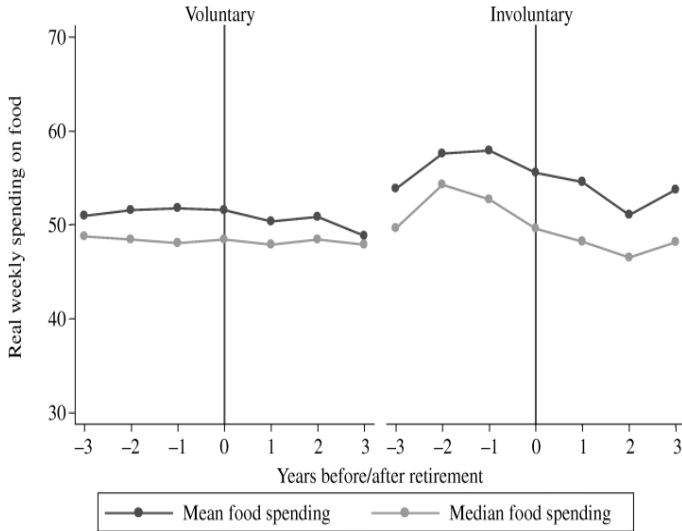
[그림 4-1] 은퇴연령의 분포 (영국, BHPS)



자료: Smith, Sarah (2006, C134).

Smith(2006)는 영국의 BHPS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소비 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을 살펴보았다. Smith(2006)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남성 비자발적 조기은퇴자와 자발적 은퇴자의 식품비 지출을 비교해 본 결과, 비자발적 은퇴자의 경우에 있어서 식품비 지출의 감소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의 정의나, 교육수준, 혹은 연금의 형태 등은 별다른 식품비의 지출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비자발적 은퇴자에 대해서만 은퇴이후의 자산감소가 관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자발적 은퇴자는 남성 은퇴자의 40% 정도나 되는데, 이들의 은퇴이후 식품비 지출 감소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4-2] 은퇴유형별 식품비 지출 비교 (영국, BHPS)



자료: Smith, Sarah (2006, C139).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의 노인가구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월평균소득은 180.2만원(연간으로는 2,16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 조사된 월평균 소득 151만 3천원에 비해서는 19.1% 정도 늘어난 규모이다. 총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높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간 316만원(월 평균 26.4만원)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동’지역의 연소득이 2,394.4만원(월 199.7만원)으로 ‘읍·면’지역보다 월평균 61.1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연 3,763만원(월 314만원)으로 가장 높고, 독거인 경우가 연 841만원(월 7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가 근로소득비중이 5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각각 45.0% 및 32.7%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유자는 연 3,950만원(월 329만원)이고, ‘무학(글자 모름)’의 경우 연 1,568만원(월 1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고학력자 소득의 40%선에 불과하였다. 소득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학력자는 공적이전소득(36.1%)과 재산소득(16.3%)의 비중이 높았으나, 무학인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노인가구의 소득 현황

(단위: 만원,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공적 이전	기타 소득	총소득
전체	774	390	216	340	210	32	2,169
성별							
-남자	793	412	284	336	483	34	2,342
-여자	760	374	165	343	354	30	2,025
지역별							
-동부	973	318	265	355	458	27	2,396
-읍.면부	353	543	111	308	308	41	1,664
연령대별							
65-69세	904	508	247	282	450	38	2,518
70-74세	727	377	233	345	397	28	2,108
75-79세	581	278	186	387	421	25	1,878
80-84세	586	345	152	384	365	42	1,874
85세 이상	992	382	211	334.5	316	28	2,265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83	64	88	347	237	22	841
노인부부	229	360	274	386	511	37	1,798
자녀동거	2,253	688	207	238	346	31	3,763
기타	689	331	204	416	462	24	2,12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646	331	52	269	241	29	1,568
무학(글자해독)	687	351	90	305	282	23	1,737
초등학교	724	371	182	334	330	28	1,969
중·고등학교	979	369	314	380	460	35	2,537
전문대 이상	729	775	660	435	1,279	72	3,95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

〈표 4-2〉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현황

(단위: 만원)

	소비지출(월평균, A)	연소득(B)	소비성향(A/B)
전체	141.3	2,169	0.782
성별			
-남자	155.6	2,342	0.797
-여자	110.9	2,025	0.657
지역별			
-동부	152.5	2,396	0.764
-읍·면·부	132.8	1,664	0.958
연령대별			
65-69세	157.9	2,518	0.753
70-74세	138.7	2,108	0.790
75-79세	126.6	1,878	0.809
80-84세	128.5	1,874	0.823
85세이상	150.6	2,265	0.798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63.4	841	0.905
노인부부	122.7	1,798	0.819
자녀동거	230.0	3,763	0.733
기타	145.0	2,126	0.81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07.8	1,568	0.825
무학(글자해독)	118.2	1,737	0.817
초등학교	131.4	1,969	0.801
중·고등학교	160.7	2,537	0.760
전문대 이상	241.5	3,950	0.734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2010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은 155.6만원, 그리고 읍면지역은 1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 20만원 정도 더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후반과 85세 이상가구에서 1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75-84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27-12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월 2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이 월 63.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161만원이었으며, ‘무학(글자모름)’이 10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관련비’와 의 지출(43.0%)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보건의료비’가 24.7%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모든 구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2절 노인가구의 자산보유 현황

2010년 현재 노인부부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18.6%, 부부 중 1인만 소유한 경우가 75.0%, 그리고 부부가 모두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가구의 평균금액은 2억 1,742만원인데,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동’지역의 평균은 2억 3,217만원, 그리고 ‘읍·면’지역은 1억 8,6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10.2%, 그리고 여자의 25.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보유자의 평균 금액 또한 남자가 2억 6,807만원, 여자 1억 7,899만원으로 약 9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후기 노인그룹으로 갈수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대 후반은 7.6%가 부동

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70대 후반은 22.3%, 그리고 80대 후반은 54.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의 가액 또한 연령대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후반의 보유부동산 평균가액은 2억 7,458억원이었고, 70대 후반은 1억 9,371억원, 그리고 80대 후반은 1억 1,114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구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4.0%로 가장 높았고, 노인단독가구가 27.5%로 그 다음을 이었고, 노인부부가구가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평균가액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억 7,78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동거가구가 2억 345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가 9,15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부동산 보유비율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보유 부동산 금액 간에도 정비례 관계가 있었다. 전문대 이상 그룹에서 부동산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유부동산의 가액도 5억 6,50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무학(글자모름)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비율이 39.7%에 달하며, 보유중인 부동산의 평균가액도 6,56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5분위별 부동산 미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제1분위(최하위 소득계층)가 26.9%, 그리고 제5분위(최상위 소득층)가 25.5%로 높았으며, 제3분위와 제2분위의 부동산 미보유율이 11.4%와 12.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중인 부동산의 평균가액은 소득분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분위의 평균부동산가액은 6,69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제2분위는 1억 3,256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제3분위는 2억 81만원, 4분위는 2억 5,794만원, 그리고 제5분위에서는 4억 2,90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노인가구의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 명, 만원)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만	부부 모두 보유	계	보유규모
전체	18.6	75.0	6.4	100.0	21,742
지역별					23,217
-동부	18.7	74.9	6.4	100.0	23,217
-읍.면부	18.5	75.1	6.5	100.0	18,612
성별					
-남자	10.2	81.5	8.3	100.0	26,807
-여자	25.0	70.0	4.9	100.0	17,899
연령대별					
65-69세	7.6	83.1	9.3	100.0	27,458
70-74세	13.6	78.9	7.5	100.0	23,126
75-79세	22.3	73.1	4.6	100.0	19,371
80-84세	34.9	63.4	1.7	100.0	13,342
85세이상	54.0	44.0	2.0	100.0	11,114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27.5	72.5	0.0	100.0	9,192
노인부부	6.7	82.6	10.7	100.0	27,789
자녀동거	34.0	62.0	4.0	100.0	20,345
기타	15.2	82.1	2.6	100.0	19,962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39.7	70.5	1.5	100.0	6,502
무학(글자해독)	28.0	82.9	3.8	100.0	10,987
초등학교	15.2	81.7	5.8	100.0	20,693
중·고등학교	10.2	75.7	8.4	100.0	28,881
전문대 이상	6.9	63.9	17.3	100.0	56,503
소득분위별					
제1분위	26.9	70.5	2.5	100.0	6,695
제2분위	12.6	82.9	4.4	100.0	13,256
제3분위	11.4	81.7	6.9	100.0	20,081
제4분위	16.8	75.7	7.5	100.0	25,794
제5분위	25.5	63.9	10.6	100.0	42,908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다음의 표는 노인가구(부부)를 기준으로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구 중 17.8%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부부 중 한사람만 보유한 경우는 41.9%, 그리고 부부가 모두 보유한 경우는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평균값은 2,554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금융자산 미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10.6%p에 이르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금융자산 미보유율이 더 높았으며, 남자의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은 3,125만원, 그리고 여자는 2,123만원으로 남자보다 천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60대 후반은 15.7%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70대 후반은 17.6%, 그리고 80대 후반은 26.4%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평균 금액은 60대 후반이 2,613만원, 70대 초반 2,898만원, 70대 후반 2,790만원, 80대 초반 1,585만원, 그리고 80대 후반 이후는 1,456만원으로 나타나 역-U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3,4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거노인가구가 934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비율이나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5분위별로 조더라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제5분위는 평균 6,105만원, 제4분위는 2,406만원, 제3분위는 2,083만원, 제2분위는 1,374만원, 그리고 제1분위에서는 807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노인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

(단위: %, 명, 만원)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만	부부 모두 보유	계	보유규모
전체	17.8	41.9	40.3	100.0	2,554
지역별					
-동부	21.2	40.3	38.5	100.0	2,910
-읍.면부	10.6	45.2	44.2	100.0	1,800
성별					
-남자	14.9	31.1	54.0	100.0	3,125
-여자	20.0	50.1	29.9	100.0	2,123
연령대별					
65-69세	15.7	34.3	50.0	100.0	2,613
70-74세	16.5	39.4	44.2	100.0	2,898
75-79세	17.6	45.7	36.7	100.0	2,790
80-84세	22.8	52.7	24.4	100.0	1,585
85세이상	26.4	57.6	16.0	100.0	1,456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21.8	78.0	0.1	100.0	934
노인부부	10.7	27.3	62.0	100.0	3,422
자녀동거	26.2	42.7	31.2	100.0	2,230
기타	25.5	37.1	37.5	100.0	2,237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21.0	61.6	17.4	100.0	563
무학(글자해독)	22.3	50.4	27.3	100.0	1,626
초등학교	16.4	40.3	43.3	100.0	2,158
중·고등학교	16.4	32.6	51.0	100.0	3,060
전문대 이상	11.6	28.5	59.9	100.0	8,604
소득분위별					
제1분위	25.4	59.8	14.8	100.0	870
제2분위	13.8	41.9	44.2	100.0	1,374
제3분위	16.6	35.6	47.8	100.0	2,083
제4분위	16.4	36.7	46.9	100.0	2,406
제5분위	16.8	35.4	47.8	100.0	6,105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다음 표는 노인가구(부부기준)의 부채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부채가 없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71.6%에 이르고, 부부 중 한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27.1%, 그리고 부부 모두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이었으며, 평균 부채규모는 1,7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이 31.3%로 농촌지역 22.1%보다 더 높았다. 평균 부채금액 또한 도시지역이 2,173만원으로 농촌지역의 766만원보다 1,400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부채보유 비율도 여자보다 더 높고, 평균 부채금액 또한 남자가 2,123만원으로 여자의 7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부채수준은 60대 후반 2,548만원, 70대 초반 1,742만원, 70대 후반 1,356만원, 그리고 80대 이후에서는 약 740만원 정도로 낮아지고 있었다.

부채보유 비율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녀와 동거하는경우가 27.6%, 노인부부는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자녀동거의 경우가 2,2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부부가 1,883만원, 기타가 1,338만원, 그리고 독거노인의 경우가 73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타났는데, 전문대 이상이 32.9%, 중·고등학교가 35.2%, 초등학교가 29.1%, 그리고 무학은 10%대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규모 역시 고학력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전문대 이상의 경우 4,254만원, 중·고등학교 2,609만원, 그리고 무학의 경우에는 600-8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부채보유 비율과 부채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노인가구의 부채 보유 현황

(단위: %, 명, 만원)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만	부부 모두 보유	계	보유규모
전체	71.6	27.1	1.3	100.0	1,723
지역별					
-동부	68.7	29.6	1.7	100.0	2,173
-읍.면부	77.9	21.7	0.4	100.0	766
성별					
-남자	65.9	32.5	1.7	100.0	2,123
-여자	76.0	23.0	1.1	100.0	1,419
연령대별					
65-69세	61.6	36.1	2.3	100.0	2,548
70-74세	67.7	31.0	1.3	100.0	1,742
75-79세	78.4	20.7	0.9	100.0	1,356
80-84세	84.7	15.2	0.1	100.0	743
85세이상	90.9	9.0	0.2	100.0	740
가구형태별					
노인독거	84.2	15.8	0.0	100.0	733
노인부부	67.4	30.9	1.7	100.0	1,883
자녀동거	70.6	27.6	1.7	100.0	2,213
기타	68.7	31.3	0.0	100.0	1,338
교육수준별					
무학(글자모름)	87.9	12.1	0.1	100.0	610
무학(글자해독)	80.0	19.5	0.5	100.0	805
초등학교	69.8	29.1	1.1	100.0	1,459
중·고등학교	62.8	35.2	2.0	100.0	2,609
전문대 이상	63.2	32.9	3.9	100.0	4,254
소득분위별					
제1분위	85.8	13.5	0.7	100.0	530
제2분위	73.2	26.7	0.1	100.0	816
제3분위	69.6	29.5	0.9	100.0	1,390
제4분위	65.3	33.0	1.7	100.0	2,073
제5분위	64.1	32.8	3.1	100.0	3,806

주: 부부기준인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제3절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현황

여기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공·사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다. <표 4-6>은 2009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을 취업여부별 및 성별로 정리한 것이다.⁵⁾ 우선 한 종류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1.5%이었으며, 베이비붐세대의 절반을 넘는 58.5%는 노후를 위하여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34.5%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19.0%이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11.7%인데, 그 중에서 개인연금만 가입한 사람은 6.1%, 퇴직연금(퇴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은 13.3%인데, 그 중에서 퇴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2%,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9.9%, 그리고 세 종류의 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은 2.4%이었다.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7.4%,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9.9%,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3.0%이었다. 취업자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24.5%, 개인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5%,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4.9%, 그리고 공적연금과 개인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4%이었다. 또 취업자 중에서 무연금인 사람은 46.2%이고, 비취업자 중 무연금인 사람은 82.9%에 달하고 있다.

5) 석재은·이기주(20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자료는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권이 없는 가입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가입하여 수급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표 4-6〉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2009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19.0	24.5	8.0	39.2	14.0
b. 퇴직연금만	1.0	1.5	0.0	1.9	0.7
c. 개인연금만	6.1	5.0	8.2	0.6	7.4
d. 공적연금+개인연금	3.2	4.4	0.9	5.0	2.8
e. 공적연금+퇴직연금	9.9	14.9	0.0	14.1	8.9
f. 공적+퇴직+개인연금	2.4	3.6	0.0	8.7	0.8
g. 무연금	58.5	46.2	82.9	30.4	65.4
-공적연금 가입(a,d,e,f)	34.5	47.4	8.9	67.1	26.4
-퇴직연금 가입(b,e,f)	13.3	19.9	0.0	24.8	10.4
-개인연금 가입(c,d,f)	11.7	13.0	9.1	14.4	11.0
전체(a~g)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원자료.

연금가입률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공적연금이 67.1%, 퇴직연금이 24.8%, 개인연금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39.2%,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4.1%, 세 가지 모두 가입한 경우는 8.7%, 그리고 30.4%는 무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률은 26.4%인데,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은 14%이었다. 여성 중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한 사람은 10.4%,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1.0%, 그리고 무연금인 사람은 65.4%에 달하고 있다.

〈표 4-7〉 소득계층별 연금가입률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I	II	III	IV	V
a. 공적연금만	18.9	13.8	11.9	17.4	23.9	18.4
b. 퇴직연금만	1.1	0.0	1.5	0.7	0.6	1.6
c. 개인연금만	6.0	0.0	7.5	2.1	4.5	9.4
d. 공적연금+개인연금	3.7	0.0	2.6	0.4	1.0	8.1
e. 공적연금+퇴직연금	9.3	0.0	0.0	10.6	12.2	10.0
f. 공적+퇴직+개인연금	2.3	0.0	2.2	0.0	0.0	5.4
g. 무연금	58.8	86.2	74.4	68.8	57.8	47.4
-공적연금 가입(a,d,e,f)	34.2	13.8	16.7	28.4	37.1	41.9
-퇴직연금 가입(b,e,f)	12.7	0.0	3.7	11.3	12.8	17.0
-개인연금 가입(c,d,f)	12.0	0.0	12.3	2.5	5.5	22.9
전체(a~g)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노후보장패널조사 3차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총소득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2) 반올림으로 인하여 부분합은 1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원자료

〈표 4-7〉은 소득계층별로 연금가입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분위 계층에서는 13.8%가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무연금이 86.2%에 이른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연금의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58% 정도가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최고 소득계층인 5분위 그룹에서도 무연금이 47.4%에 이른다는 점은 특이하다. 5분위 그룹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다른 그룹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4-8>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연금 형태별 순가용자산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순가용자산이란 비주거용 부동산자산과 총 저축의 합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말한다.⁶⁾

6)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와는 달리 주택가격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표 4-8〉 가입연금 형태별 순가용자산 규모(2009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3,846.5	4,310.3	3,286.9	18,360.0	3,540.3
b. 퇴직연금만	1,569.8	1,569.8	-	2,507.3	958.1
c. 개인연금만	2,192.5	2,134.6	2,544.5	1,959.5	2,353.8
d. 공적연금+개인연금	8,859.1	9,919.3	444.2	4,945.6	10,620.1
e. 공적연금+퇴직연금	1,506.2	1,506.2	-	7,259.4	-749.0
f. 공적+퇴직+개인연금	4,384.1	4,384.1	-	3,483.6	6,840.5
g. 무연금	936.3	1,291.7	542.5	1,331.0	891.0
-공적연금 가입(a,d,e,f)	2,765.9	2,827.8	2,107.6	3,495.1	2,308.8
-퇴직연금 가입(b,e,f)	2,024.9	2,024.9	-	5,555.9	-51.5
-개인연금 가입(c,d,f)	5,335.5	6,233.8	2,790.8	4,648.9	5,558.0
전체(a~g)	1,750.3	2,174.3	907.4	2,913.6	1,463.0

주: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원자료. 밑줄 친 수치는 관찰치의 수가 적어서 특이항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임.
 자료: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원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8,900만원 정도의 순가용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가진 사람들이 4,4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무연금인 사람들은 936만원으로 가장 적은 순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취업여부별로 살펴 보더라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순가용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세 가지 연금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순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비취업자의 경우 공적연금만을 가진 사람들이 3,29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연금만 가진 사람들이 2,545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성별로 순가용자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만 가진 남자와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가진 여자가 가장 많은 순가용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보험가입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상우·정원석(2012)에서는 베이비붐 세

7) 이 부분은 관찰치의 개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대의 생명보험 가입율이 87.3%로 베이비붐 전후의 다른 세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으며, 질병보험(83.7%), 사망보험(28.6%), 그리고 연금 및 저축성 보험(25.3%)에 가입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를 위해 공·사적 연금가입이 가장적합하다(66%)고 대답하였던 반면, 자녀의 지원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및 이후의 세대에 비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노후대비 월평균 저축액은 32.1만원이었으며, 이 저축으로 노후에 필요한 비용의 45.2%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공·사적연금 납입보험료는 월평균 27.5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기대연금자산과 은퇴행위간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자산 보유(연금자산 포함) 여부 등인데, 그 중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충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대 연금자산이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금자산의 증가에 의한 소득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로 은퇴시점이 빨라졌다’는 결과(안중범 외, 2008)도 있고, ‘중·고령자 중 남성가구주의 경우에는 외부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은퇴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공적연금이 개인들의 노동공급과 여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고 한다(김헌수 외, 2010). 또 이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으나, 1945년 이전에 출생한 50대 후반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연기효과는 비가입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다(김원섭 외, 2008). 이상의 연구로부터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대연금자산과 은퇴행위간의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초 도입 후 20여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20년 가입을 통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었고, 또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수급율이 낮아진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축적된 연금자산이 은퇴행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상 법정정년에 앞서서 조기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자산 축적과 은퇴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연금액이 노후 생활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5절 노인소득의 국제 비교

OECD(2011)에 의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post-tax) 지니계수는 0.40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값은 멕시코 0.524, 칠레 0.47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30개국의 평균은 0.299이며, 일본은 0.348, 미국은 0.386,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는 체코 0.18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세후 지니계수는 0.315인데,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0.314와 유사한 크기이다. 전체인구의 지니계수와 65세 이상인구의 지니계수와의 격차는 한국이 0.094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 0.048, 이스라엘 0.027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인 소득분배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노인인구에 대한 지니계수는 상당히 나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2011)에서는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노인가구 평균소득의 전체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을 살펴 보면 OECD 전체 평균은 82.4%에 이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의 67% 수준에 불과한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한다(30개 국가 중 24위).⁸⁾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외국 노인에 비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은 월등히 높은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OECD국가의 노인 근로소득의 평균비율은 21.7%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58.4%나 된다. 이처럼 고령자 중 충분하게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노후대비 저축 규모나 재산소득이 적은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이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근로소득이 적고,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령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의 경우 공적 연금제도가 갖추어진 다음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찾아왔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빈곤율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약 180만명 정도인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3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월평균 연금액은 28만원에 불과하여 노령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⁹⁾

8) 이처럼 한국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공적연금이 고령자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0〉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층의 소득수준

(단위: %, US\$)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대비 소득수준			65세 이상 가구	
	65세 이상	66-75세	75세 이상	평균소득 (USD, PPP)	
호주	69.7	71.9	66.4	17,340	18
오스트리아	96.6	100.8	91.5	26,088	5
벨기에	76.4	80.5	71.0	18,217	14
캐나다	90.8	94.8	85.4	26,510	4
체코	79.1	80.8	76.3	11,046	26
덴마크	72.4	76.4	67.6	17,604	16
핀란드	74.9	78.4	69.6	17,387	17
프랑스	94.5	97.6	91.2	21,922	11
독일	91.5	96.3	85.5	22,395	9
그리스	80.0	83.8	74.4	15,626	21
헝가리	83.8	86.8	78.8	9,597	27
아이슬란드	87.8	95.9	77.5	21,811	12
아일랜드	65.9	70.4	59.8	16,838	19
이탈리아	83.4	88.4	76.0	16,687	20
일본	86.6	88.5	84.2	22,425	8
한국	66.7	66.3	67.4	14,238	24
룩셈부르크	96.0	94.4	98.3	37,630	1
멕시코	97.1	98.1	95.1	6,470	30
네덜란드	87.0	89.3	83.8	26,538	3
뉴질랜드	68.0	69.7	64.5	14,921	23
노르웨이	78.9	88.1	69.2	23,308	7
폴란드	94.7	94.8	94.6	9,393	28
포르투갈	79.5	84.1	72.7	12,507	25
슬로바키아	78.0	83.3	68.9	7,460	29
스페인	79.1	81.1	76.4	15,505	22
스웨덴	82.0	91.6	69.8	18,165	15
스위스	80.2	82.0	76.9	24,185	6
터키	91.9	89.5	99.7	5,829	31
영국	72.9	76.7	68.2	22,053	10
미국	86.2	95.7	75.8	28,437	2
OECD30	82.4	85.9	77.9	18,271	13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 9) 이에 더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부모부양 의식의 감소는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4-11〉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소득 구성

(단위: %)

	공적이전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호주	44.6	19.4	35.9
오스트리아	79.4	19.1	1.5
벨기에	81.1	11.8	7.1
캐나다	46.7	13.4	39.9
체코	75.9	23.6	0.5
덴마크	56.8	11.5	31.7
핀란드	14.9	11.2	73.9
프랑스	86.7	6.4	6.9
독일	74.9	9.9	15.2
그리스	66.5	25.5	8.0
헝가리	85.6	11.8	2.6
아일랜드	61.4	28.5	10.1
아일랜드	53.6	20.9	25.4
이탈리아	72.5	23.6	4.0
일본	48.3	44.4	7.3
한국	15.2	58.4	26.4
룩셈부르크	79.3	12.0	8.7
멕시코	21.4	54.4	24.3
네덜란드	48.4	9.8	41.8
뉴질랜드	64.4	15.1	20.5
노르웨이	61.7	11.2	27.1
폴란드	78.4	20.6	1.0
포르투갈	66.1	29.0	4.8
슬로바키아	82.5	17.1	0.4
스페인	70.8	24.1	5.1
스웨덴	70.0	9.0	21.0
스위스	48.1	11.8	40.1
터키	46.3	40.9	12.8
영국	49.8	11.9	38.3
미국	35.4	34.3	30.3
OECD30	59.6	21.4	19.1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들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하여 9만4천원, 그리고 부부가구에 대하여 15만 1,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가구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욕구 대비 수급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¹⁰⁾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로 정의한다. 여기서 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인 정부가 발표한 해당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text{욕구 대비 수급률} = \frac{\text{기초보장수급가구}}{\text{소득빈곤가구}} \times 100 \text{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10)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욕구를 가진 가구라는 개념에서 소득을 산출할 때 공적이전을 받기 전의 소득을 사용한다.

정도 보장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경상소득에서의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지표는 급여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필요 최소 소비액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가구가 빈곤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 소비액을 실제 지출한 총 생활비라고 전제한다.

$$\text{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총생활비}} \times 100 (\%)$$

소득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경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text{소득 대비 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경상소득}} \times 100 (\%)$$

〈표 4-9〉 세대별 기초생활보장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 부머	이후세대
욕구 대비 수급률	46.79	44.34	60.25	46.42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41.14	46.73	34.15	32.56
소득 대비 보장수준	40.27	45.20	34.17	32.64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이 결과에 의하면 욕구대비 수급률은 6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의 의미는 절대빈곤가구 중에서 46.8%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60.3%가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나 소득대비 보장수준은 40~41%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이 소득이나 생활비의 4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34.2%를 충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분포와 빈곤 현황을 살펴본다.

제6절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한 검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비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식료품이 20%, 주거·수도·광열비가 13% 보건과 교통이 각각 1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마련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0%,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이 31.4%, 그리고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이 8.7%인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처럼 노후 소득은 주로 생활비로 쓰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0).

앞에서 살펴본 소득의 구성, 자산축적 정도 및 잔여수명을 종합하여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충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의 단편성과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질적인 측면에서의 충분성 여부를 부분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1) 5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향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57.6%인데, 연령대별로는 55~64세의 경우 72.2%, 65~79세는 41.8%의 순이었다.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노후소득 불충분의 기준을 2009년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볼 때,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불충분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무연금’ 그룹이 가장 높고, ‘퇴직연금만’, ‘개인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의 경우 ‘무연금’, ‘퇴직연금만’ 그룹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무연금’, ‘개인연금만’, ‘공적연금’만 가진 경우에서 은퇴자산 충분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수준을 감안한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부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 여자의 경우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서 4분위까지도 노후소득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유족연금의 규모와 여성의 상대적 장수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이다.

노후소득 충분성을 논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은퇴전후의 소득 추정치를 구하고, 각종 연금자산의 규모를 추정한 다음, 예상되는 공적 및 사적이전의 흐름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의 흐름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도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연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장래 소득흐름을 예측하고, 연금자산 규모를 추정한 다음 그에 기반한 노후소득 충분성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주된 이유는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축적된 연금자산의 정보가 불완전하고, 서로 다른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목적에 맞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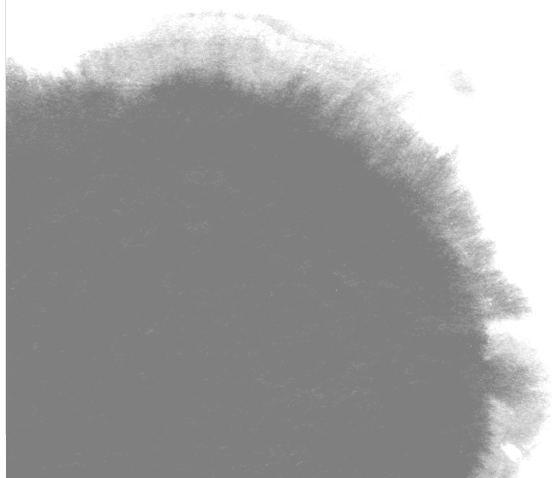
였으나, 전국을 대표하기 보다는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관련 행정자료의 공개와 연구지원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래 이자율,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등 노후소득의 흐름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제반 가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그에 기반하여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5장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의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3,619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2010년 현재는 6.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이 노인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의 은퇴준비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서울대 노년 및 은퇴지원센터와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은퇴 이후 현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행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은퇴준비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가 은퇴 후 필요한 연간생활비는

12) 피델리티 자산운용(주)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은퇴설계지원센터(연구책임자 최현자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자사의 ‘은퇴준비지수 계산 모델’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5,008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각종 연금이나 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은 3,50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71%밖에는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2010년의 조사에서는 은퇴 후 소득으로 생활비의 68%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3%p 정도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이 비율이 66%로 나타나서 2년 전에 비하여 10%p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연간소득은 늘지 않은데 비하여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¹³⁾

한편 은퇴 직전의 소득 대비 은퇴 후 기대소득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58%(2008년), 독일 56%(2008년), 일본 47%(2009년), 그리고 홍콩 50%(2012년)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43%(2012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2억8천만원인데, 대부분의 자산이 거주주택 형태이고 금융자산이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은퇴이후의 소비지출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에서 은퇴 전 자산축적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중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09년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과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 보유 여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불충분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무연금’ 그룹이 이 가

13) 참고로 2010년 ‘피델리티 은퇴준비지수(The Fidelity Retirement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에 있어 은퇴 후에 필요할 것으로 희망하는 생활비가 은퇴 직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목표소득대체율은 62%, 은퇴 후 실제 예상되는 소득이 은퇴직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은퇴소득대체율은 41%, 양 지수 간의 격차는 21% 포인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 높고, ‘퇴직연금만’ 또는 ‘개인연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의 경우 ‘무연금’, ‘퇴직연금만’ 그룹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무연금’, ‘개인연금만’, ‘공적연금’만 가진 경우에서 은퇴자산 충분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부족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에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가능성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근로소득이 적고,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노령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제도가 먼저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미처 성숙되기도 전에 고령화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약 180만 명 정도인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3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연금액은 28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부모부양 의식의 감소는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

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하위 자산보유계층에서 예상하지 못한 은퇴자의 소비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고려한다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중 고령층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방안,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변화폭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제도의 개선,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녀에 의한 부모 부양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노후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최하위 자산보유계층에서 예상하지 못한 은퇴자의 소비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감안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퇴가 가까워진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여전히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 이후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1~63세에 이르기까지는 국민연금 미수급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은퇴이후부터 연금수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입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은퇴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와 더불어 세제상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퇴직일시금이나 노후대비용 축적자산이 자영업에 투입된 직후 모두 소진되어 노후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전교육과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연구원(2010), 제3차(2009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심층분석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2010a), 제3차(2009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김상호 (2007),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5(3), pp. 119-142.
-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노동리뷰』, 6월호, pp. 21-36.
- 김현정·김우영 (2009),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15(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1-36.
- 김현정·김우영·김기호 (2009),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66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대근·이창용 (1997),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시내·심규호 (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 준·김지경·신인철 (2009),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백희중·석상훈·김현수·이은영 (2011), 한국인의 은퇴준비와 노후소득수준의 적절성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석상훈·장선구 (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석상훈 (2010),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 분석, 보건사회연구 30(2), 5-28.
- 석재은·이기주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2010년 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안중범·전승훈 (2004), 「은퇴결정과 은퇴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3), pp. 1-23.
- 안중범·전승훈 (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권, pp. 5-33.
- 유경원 (2012),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보험연구원.
- 유경원·조은아 (2006),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윤재호·김현정 (2010), 은퇴와 가계소비간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 이상우·정원석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KiRi Weekly, 9월 10일자.
- 이수욱 (2010), 베이비부머 가구의 소득변화와 주택시장, 한국주택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이정우 (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 이철선 (2009),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9),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

- 금의 자산충분성, 경제학연구 57(3), 67-100.
- 정경희 외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04.
- 정경희 외(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경희 (2010),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자료집, pp. 1-22.
- 정호성 (2007),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30호, 삼성경제연구소, 2월 12일.
- 최필근 (2008), 「노인가구의 자산(소득) 및 지출현황 분석방안 검토」, 2008상반기 수시과제, 통계개발원.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 (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 최현자 (2012), 고령화와 은퇴-한국가계의 준비, 2012 Seoul Asian Financial Forum.
-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5월 10일.
-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8월 2일.
- 한 준 (2009), 「세대의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 준·김지경·신인철(2009),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경혜 (2010), 「한국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2010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 한광섭·황광명(2003), “가계의 유동성과 소비간 관계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허석균(2005),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동성 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7(1).

Ando, Albert, and Franco Modigliani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Part 1, Mar., pp. 55-84.

Banks, James, Richard Blundell, and Sarah Tanner (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53.

Bartholi and Ito(1992),

Bernheim, B. Douglas, Jonathan Skinner and Steven Weinberg (2001),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Sep., pp. 832-857. Stable URL: <http://www.jstor.org/stable/2677815>

Carrol, Christopher D. (2001),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With and Without Liquidity Constraint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8837.

Deaton, Angus (1997),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A Microeconometric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y, Johns Hopkins University for the World bank, Baltimore.

Easterlin, Richard A., Christine M. Schaeffer, and Diane J. Macunovich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3), Sep., pp. 497-522.

Friedman, Milton A. (1957),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iedman, Milton A. (1963), "Windfalls, the Horizon, and the Related

- Concepts i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in Carl Christ, et al. (eds.), *Measurement in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William H. (2003), *Econometric Analysis*, Fourth Edition, Prentice-Hall.
- Hall, Robert E. (1978),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pp. 971-987.
- Hall, Robert H., and Frederic S. Mishkin(1982), "The Sensitivity of Consumption to Transient Income: Estimates from Panel Data on Households," *Econometrica* 50(2), pp. 461-481.
- Hayashi, Fumio (1997), *Understanding Savin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urd, Michael D. (1989),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Science*, New Series, Vol. 244, No. 4905, May 12, pp. 659-664.
- Hurd, Michael D., and Susann Rohwedder (2003),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ticipated and Actual Declines in Spending at Retire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9586.
- Hurd, Michael D., and Susann Rohwedder (2006), "Alternative Measures of Replacement Rates,"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2006-132.
- Hurd, Michael D., and Susann Rohwedder (2008),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ctual Spending Change in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3929.
- Keister, Lisa A., and Natalia Deeb-Sossa (2001),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wealth

-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May, pp. 569-579.
- Kitamura, Yukinobu, et al. (2000), *Household Savings in Japan Revisited*, Technical Report no. 2000-12, Hitotsubashi University.
- Lee, Ronald and Andrew Mason (2011), *Population Aging and the Generational Economy*, Edward Elgar.
- Love, David A., Paul A. Smith and Lucy C. McNair (2008), “A New Look at the Wealth Adequacy of Older U.S. Household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4(4), December.
- Lusardi, A., and O. Mitchell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 205-224.
- Modigliani, Franco, and Richard H. Brumberg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enneth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Munnell, Alicia H., Anthony Webb and Luke Delome (2006), "A New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 Issue in Brief, No. 48,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OECE(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 Quine, Susan, and Stacy Carter (2006), “Australian baby boomers' expectations and plans for their old age”, *Australian Journal on Ageing* 25, Jan., pp. 3-8.
- Smith, Sarah (2006),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d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Evidence from the British

- Household Panel Survey," *Economic Journal* 116(510), pp. C130-C148.
- Wolff, Edward N. (2007), "The retirement wealth of the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 pp. 10-40.
- Zeldes, Stephen P. (1989), "Optimal Consumption with Stochastic Income: Deviations from Certainty Equival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2), pp. 275-298.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패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준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준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합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환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변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식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정)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중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